

홍방안

# 훈련장

정당의 '개입금지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지자체선거를 정당에 치르는 정치적 선거가 아닌 '행정실무적 선거'로 제한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들과 친화력을 갖는 범여권 인사들을 하부조직으로 포섭하여 차기 대권경쟁의 조직과 근거를 만들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월계수회나 대지회(회장 최윤지 의원)등 범월계수회에 포함되는 20여명의 지역구의원들이 자

통한 평민당의 보수연합, 그리고 내각제 개헌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다. 평민당과 신주류 사이에는 수서사건을 계기로 이미 타협이 이루어졌다. 즉 평민당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2억 원을 개인보물로 규정하여 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기로 한 검찰의 방침과 이에 뒤이어 마치 예정되었던 것처럼 기초지방의회 분리선거 실시가 발표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증명해준

## 집권장에' 광역선거 무산될듯 군군부 대권 경쟁 첨예화

신의 '식구'들을 이번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시켜 월계수회의 기반조직 확대를 꾀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이번의 기초의회선거의 분리선거 결정은 기본적으로 신주류와 친위내각의 애초의 정국운영 구상이 관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수서사건과 뇌물유사건이 신주류와 친위내각의 정국운영방식이 관철될 수 있는 '매개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즉 수서사건과 뇌물유사사건을 통해 자행되고 있는 제도정치권 전반에 대한 '목조르기'는 이처럼 신주류의 정국구상이라는 복잡한 배경 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 Ⅲ. '신주류'의 대권전략

신주류는 두 사건을 통해 기존 정치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이른바 '세대교체론'의 직접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수서사건이 '청와대 개입여부'로 확대된 것을 제외한다면, 이번 수서사건으로 '민자당 지도부와 평민당 지도부가 특혜의혹에 휘말림으로써, 신주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세대교체를 위한 정치적 조건을 한층 성숙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수서사건으로 인한 기존 정치권의 해체와 이를 통한 신주류의 입지강화, 이에 따른 지자체 분리선거 결정은 결국 신주류의 대권전략이 더욱 현실성을 갖고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 Ⅳ. 내각제 개헌과 '차기 대권'

이로써 신주류는 '차기대권'을 향한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신주류의 차기대권을 위한 노력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로 예상된다. 신주류는 먼저 지방의회의 승리를

다. 따라서 신주류는 수서사건을 계기로 다져진 평민당과의 '타협'을 토대로 지자체 선거 승리를 통한 내각제 개헌을 관철시킬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공안과는 단순히 내각제개헌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컨대 공안파에 의한 내각제 개헌이 양김을 축으로 하는 기존 정치권의 해체와 이를 통한 자신들의 입지강화를 노리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안파의 궁극적 목적은, 차기대권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이 계속 유지하는데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신공안파가 그간 구TK(김윤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와의 갈등으로 인해 늦춰왔던 권력 장출의 지역적 기반인 대구·경북의 '통일'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통일'은 총선 직후에 있을 대통령 후보경선에 대비해 월계수회가 지구당과 대의원 개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철언 장관이 14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에서, 그리고 월계수회의 핵심인물인 것처럼 기획조정실장이 대구 북구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월계수회가 당내 경선을 통해 차기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인석

(성공관대 강사·행정학)

## 회기동, 서천리의 선거풍속도

### 서울

"신경 안쓰면 모르죠 뭐, 요즘은 TV, 신문도 잘 안봐요, 보면 속만 상하니까요" 30여년만에 다시 실시되는 지방자치제 기초단체의회선거 및 광역단체선거는 현 정치권의 온갖 부패에 관한 국민들의 불신감에서 인지 지역주민의 무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기초의회 선거는 회기동 의원 1인을 비롯 동대문구 39명의 의원들 각 시·군·구 기초지역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민주시민의 의회의 토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이러한 위상을 가진 이번선거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발전의 구체적인 실현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의 지역주민들은 지자체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물음조차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무관심했다.

"대통령도 계획없이 선거공약을 낸 발하는데 하물며 지역의원이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에 모후보 선거사무장은 거침없이 대답한다.

회기동에 출마한 두 후보들은 제각기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들은 모두 회기동의 발전이라는 취지에 엮인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모두 "갑자기 실시된 선거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아닌지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라고 답변한다.

회기동에 출마한 후보를 살펴보면 회기동 방범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후보와 평민당 동대문 갑 지구당 선전위원장 역임한 후보가 있다.

"정치에는 관심없고 오직 지역발전

## 참여 양분 부족한 풀뿌리

### 무관심 유권자 잉태한 정치불신 "돈만 많지 누가되든 마찬가지지쇼"

### 수원

을 위해 열심히 일할 생각뿐입니다"라며 지역주민들의 현정치의 반감을 많이 의식한듯한 모후보 선거위원의 답변에는 기회주의적인 모습마저 보인다.

라는 선거사무장의 입장에서 정당이기주의적 병폐와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자신의 정치적 포부와 기득권 획득

을 위한 선거는 지역주민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26일이 선거날인데 그들은 하루 쯤 쉬어야겠어요. 누가 당선되면 편하고 나와 상관없으니까요"라는 모상점주인의 말속에는 씩이기는 풀뿌리(?)의 약취만이 선거의 흔적으로 남을 것 같다.

## 권력 의해 본질 왜곡된 법령

### 지자체 관련법안 문제점 진단

애초에 지자체 문제는 집권세력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80년대 민주화투쟁에 쫓긴 집권세력이 권력유지의 방편으로 87년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워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늦추어진 실시시기와 참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각급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가 한낱 권력과 기득권의 보전을 획책하려는 집권세력의 허울과 명분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한다.

단적으로 지자체를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타협에 그토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은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보다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각 정당의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아가 자기 정파의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보전할 것인가 하는 점에 모든 관심이 한정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는 이땅에서 자생된 것이 아니라, 외생적인 정치체도가 다른 나라에서 소화되고 정착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스러운 시행착오 그리고 혼란등의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선택이 아무리 정당적인 이해와 명분에 늘린 결과라고 해도 국민 스스로 맑고 지나가야 할 시대적인 당위이며, 넓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자원을 공평

분배하는 일부터 작게는 스스로가 자기 고향의 제1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연이자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 가치 또는 이념을 국민생활의 한 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즉 주민들이 문제를 자주적 주체라는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과 사고가 반영될 수 있는 자율의 장치를 정치인들이 그 본질에 맞게 제

하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만에 하나 중대의 강력한 중앙통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경우 당직자들은 이해를 내세워 자치단체 장의 선거를 기약없이 늦추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은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둘째, 부칙에 결과 규정을 두어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부단체장을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현행 입법체계를 계속하겠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상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히지 주체라는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과 사고가 반영될 수 있는 자율의 장치를 정치인들이 그 본질에 맞게 제

## 당리·당략에 따라 해석되는 선거법 지역실태 배제된 행정편의의 자치구 설정

도화시켜 주는 책임을 저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과 선거법을 보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를 염원하는 국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법의 경우를 보면, 첫째로 지방자치의 실시가 국민의 의사와는 달리 단계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올해 6월30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내년 6월30일까지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단계적 실시'를 피

의 직선을 통해 달성되었다면 거역의 수회원의 재판을 받거나 수서사건과 같이 외압으로 그릇된 정책결정을 하여 취임 1개월을 남기지 못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셋째로 지방자치의 기초단위와 관련된 문제로 군의 경우는 면적이나 인구면에서 너무나 광대하여 민주주의의 시험장내지 실천장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자치구의 경우는 이미 공동체로서 오랜기간 일체감을 형성해 온 지역을 행정편의상 나눈 지역을 임의로 기초자치단위로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진정한

주와 독립의 정신이라고 할 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는 싫다는 자치인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은 이를 명문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지방의원 선거법을 보자. 원래 모든 선거는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이것은 지자체 선거법도 예외는 아니어서 후보자가 언제 유권자를 만나서 어떻게 설득하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다른 범죄와 달리 주민생활 자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는 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양심을 오염시켜 지극히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해를 가져오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법행위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와 사고가 결집된 듯한 현행선거법의 일부 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과도한 기탁금문제로 능력과 자질 계도가 붕괴의식까지 갖추었어도 돈이 없어서 출마를 못하거나 혹은 정당에 배정이 없어서 기탁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면 이는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무참한 유린인 것이다.

두번째는 정치적 배제를 이유로 정당참여를 금지한 여당이나 공보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집회를 계속하는 야당 모두가 당리·당략에 따라 법규를 해석하는 등 선거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동이 가능하게 된 원인은 선거법 규정의 미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선거운동 기간중 정당의 정치집회를 허용한 점, 선거공보·벽보 등에는 정당표지를 금하면서도 정력란에의 게재는 허용한 점, 그리고 모든 공직자의 선거운동을 금하면서 가장 정치적인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은 예외로 한 점 등이 그것이다.

물론 정치와 도덕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정치수준을 하루 아침에 당위적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든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상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굳은 신념과 그것을 실현가능케 하려는 의지의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에 걸맞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관계법은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강태구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연구원)

방현기 記者

이지환 記者



다. "우리평민당이 싸워서 정취한 지자체인데 최선은 다해서 이겨야 합니다"

대자연의 순수한 입김으로 피어나는 이슬꽃—  
이 순수함을 생각하며 화장품을 만듭니다.

대자연의 숨결로 맑고 깨끗한 새벽공기를 머금고 꽃잎에 맺히는 투명한 이슬꽃 — 그 맑고 투명한 이슬에는 순수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도 이슬같이 항상 순수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 — 화장품을 만드는 일은 바로 피부의 순수를 지키며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류복을 이룰때까지 사회를 아름답게  
대평양화학



아모레 순정은 17개 중합방원 피부과와 공동연구 개발된 보다 안전한 민감성 피부 전문화장품입니다.

